해양경찰정비창 목포시대 개막… 수리조선산업 새 전기

7년 만 준공·출범…5000t급 함정 정비 인프라 구축

전남, 함정 MRO·기자재 산업 생태계 확대 등 추진

7년간의 공사를 거쳐 건립된 해양경찰정비창이 4일 목포에서 준공·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 함정 정비 인프라가 전남에 처음 구축되면서 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목포 신항만 허사도에 위치한 해경정비창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해경정비창은 5과 체계에 정원 165명 규모로 운영되며, 기존 부산정비창까지 관할하는 본원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에는 5000t급 함정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와 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플로팅도크와 쉽리프트, 안벽 등 대형 함정 정비를 위한 핵심 설비가 구축됐다.

정비창은 올해 45척의 해경 함정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2028년 이후에는 연간 160여척을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비 수요 증가와 함께 수리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해경정비창 출범을 계기로 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창 외주 발주 사업에 지역 수리조선·기자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5년 11월 해양경찰과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열어 정비창 외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다.

또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장비 대여, 기술 컨설팅 등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의 수리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수리·정비(MRO) 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지역 수리조선 기업의 함정 정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목포시 신항만 인근에서 열린 해양경찰 정비창 준공 및 출범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함정 정비에 필요한 엔진 등 핵심 기자재 기업 유치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정비창을 중심으로 수리조선과 기자재 산업이 결합된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창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상주 인력과 외주 수리업체 관계자, 함정 승조원, 교육생 등 다양한 인력이 목포를 찾으면서 지역 상권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정비창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단기 체류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경정비창 출범은 지역 수리조선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비창과 지역 산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문체부 전남광주 이전 추진…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성"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토론회서 통합특별시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이 내놓은 6대 핵심 비전에는 문체부의 전남광주특별시 이전이 포함됐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돼야 한다"며 "문화정책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예술을 연결해 지역 고유성을 키우는 '문화정체성 수호' △지역의 이야기가 세계와 만나는 '글로컬 문화수도 도약' △행정경계를 넘어 마을과 시·군을 잇는 '전남광주 문화벨트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지역 콘텐츠 생산의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콘텐츠 엔진화' △섬·바다·민주주의 등 지역 자산을 산업화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문화수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생존 전략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며 "특별법이 명시한 대로 국가에 문화수도 조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고 연결하는 토대 위에 문화가 곧 먹거리와 일자리가 되는 산업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광양 먹거리 만들겠다"…15개 공약 발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4일 광양시청 열린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만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15개 공약을 발표했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광양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도시이지만 지금 광양은 철강산업 침체, 항만 물동량 정체, 지역 상권 위축, 청년 인구 유출까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침체된 철강·항만 물류산업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며 북극항로 출발점 광양, 철강 산업 AI혁신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흥기, 접이식·제습기능 컨테이너 및 초고온 안전한 특수 컨테이너 등 스마트 K-컨테이너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항만 인프라와 배후단지 물류기반 활용한 글로벌 소재·에너지·방산 부품산업 적극 유치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인공지능(AI)으로 돈 버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AI교육 대폭 확대, AI플랫폼 구독료 지원, 기업 경쟁력 AI로 세우기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전환 강력 지원, 광양 AI창업 성지를 위한 패키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도시, 시민의 삶이 실제로 더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산업과 관광과 AI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전환도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하상용 남구청장 예비후보

'경청투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하상용 남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행정통합 후 남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회복 집중 투자를 제안했다.

하 예비후보는 4일 송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 광주 남구편'에 참석해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남구의 경제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하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구조적 변화"라며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남구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예산 중 남구 몫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백운·진월동 디지털 상권·청년벤처허브 구축 △남구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남구형 청년창업 펀드 조성 △백운-효천-나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제안했다.

하상용 예비후보는 "통합 예산이 단기성 사업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투자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분명히 설계해야 한다"며 "예산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시, 150가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 신설·10세대 이상 추가 지원

광주시는 단독·공동주택 150가구에 300W에서 10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억9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설치비 80만~200만원의 80%를 지원키로 하고, 이날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가구는 제품에 따라 약 16만~40만원 수준의 자부담(20%)만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집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등 단체 신청하거나 기존 설치 세대가 용량을 확대하면, 10%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광주지역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발코니 난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 업체 보급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니태양광 전문 시공업체로 선정된 곳은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 ㈜세진엔지니어링 등 3곳이다. 설치 후 5년간 무상수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 관리 부담을 줄인다.

300~1000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45㎾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리터급 양문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량에 해당하며, 매달 약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62세대가 지원을 받는 등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참여가구가 미니태양광 설치 전 기후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가입하고 올해 신설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항목에 따라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손두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니태양광은 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정책"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녹색에너지연구원, 햇빛소득마을 발굴 나선다

전문 지원단 가동…행정안전부 공모 선제 대응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황규철)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발굴·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지원단'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전남도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남형 에너지자립 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햇빛 소득마을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0개소, 총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전국 목표(2000개소)의 20%에 해당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 마을을 선제 발굴하고, 협동조합 설립 지원, 수익모델 고도화, 주민 수용성 제고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철 원장은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마을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의 장점을 살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